

4+1 “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4당 원내대표급 협의체 회의 민주 “9일 예산안과 일괄상정” 한국당 공세 대치 국면 격화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검찰 무마 의혹이 계속 확산하면서 여야의 충돌 우려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오는 8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법의 경우 분회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안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규모와 연동률 등을 놓고 막

판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면서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고 강조, 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약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단순히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한 뒤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분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친분계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의 공식 조직인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 및 여권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7일께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낼 예정으로 11일께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돌고구를 만들지 못하면 여야 간 전면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5석이나 250석이나... 지역구 의석 줄다리기

4+1 협의체 협상 막판 진동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를 245~25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진동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수가 245석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여수갑·울이 통합되면서 전남에서 한 석이 줄어들고 250석의 경우, 현재의 지역구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합의점이 나올지 주목된다.

일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 단일안을 오는 8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을 245석에서 더는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기반 정당들은 지역구 갑수를 막기 위해 지역구가 250석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 단일안 마련

에 있어 지역구를 245석으로 할 것인지, 250석으로 할 것인지를 관건인 셈이다. 현재 20대 국회의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원하는 정의당과 호남 지역구 축소는 안 된다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입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고 지역구 축소 시 통합합의 예상되는 호남 등 농어촌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3석을 늘리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를 250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율을 50%로 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일단 250석으로 지역구가 합의되면, 호남 의석수가 줄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송 부시장 동의하면 제보원본 공개 하겠다”

“제보경위 조사결과 그대로 발표”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제보 경위를 두고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등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는 전날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이 2017년 10월 공직자인 한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전날) 발표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전날 브리핑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송 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제보 원본과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만든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송 부시장) 동의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발표와 달리 송 부시장이 일부 언론인 터부 등을 통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에 답했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송 부시장과 직접 접촉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를 받아 이 내용을 청와대 뒷선에 보고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인 문모(52)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은 이와 관련해 지난 3~4일 문 사무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1+α, 강제징용 문제 풀 현실적 방안”

국회의장실 설명회... “내주 법안 발의...정상회담 촉매제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α(알파)’ 법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전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의장의 구상을 전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최 정책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지는 ‘김대중-오부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특임대사는 “오는 24일로 한일 정상

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 의장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하고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재단 자금 조성 때 포함하려 했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병훈 前광주시부시장 내일 조선대서 출판기념회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다 오는 7일 오후 3시30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 출판기념회를 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가수 유열의 사회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민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30여 분 간 토크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부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부시장은 “책을 통해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느꼈던 소회와 골목경제 살리기 방안, 미래산업과 같은 현안의 해결책을 풀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월 퇴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시중 前청와대행정관 총선 광산을 출마 선언

박시중 전 청와대 행정관이 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광주와 호남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기득권의 탐욕만 넘쳐나는 지역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며 “광주와 호남의 정치 혁명을 위해 누군가는 태풍을 만들어야 한다. 그 준비

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 정치”는 늙고 낡았다. 다시 광주를 세워야 한다. 국가적 의제를 주도하는 광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광주, 시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광주를 만들자”고 포부를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시민의 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전진숙 前청와대행정관 8일 교통연수원서 출판기념회

전진숙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오는 8일 오후 3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전 전 행정관이 펴낸 책 ‘희망의 증거’는 ‘첫눈의 미소’와 ‘다시, 시민 속으로’ 등 두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전 전 행정관은 “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힘있게 걸어왔다. 묵수였던 아버지

와 생선 장수였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왔다”며 “이제 정치가 평범한 시민들의 희망의 증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행정관은 출판기념회 축하회찬대신 ‘희망연탄’을 기증받아 기부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박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공 장** ▶ 광주 서구 매월동 토지 : 1170(353.925평) 건물 : 881.9㎡(266.775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7억2천4백4십만원, 최저가 (70%) 12억7백만원**
- 주 택** ▶ 광주 남구 월산동 295-7번지 토지 : 1655㎡(503.7평) 건물 : 346.69㎡(104.9평) **덕림산방 감정가 11억7천만원, 최저가 11억7천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70%)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70%)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